

“건설시장 유령 회사 퇴출”

도 실태조사 나서 ... ‘에코홈페어’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가 추진된다.

도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실시공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 위장전입 업체 실태조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를 재고, 강원에코홈페어 개최, 건설사업 평가 실시 등을 통한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도는 건설업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장전입 건설업체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한다.

그동안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량 확보와 각종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위장전입 업체 퇴출이 시급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건설업 자본금 위주 조사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솟아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론 도내에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로, 지역 물량을 따내면 하도급을 주고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아 부실시공, 임금 체불, 지위 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업체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입

찰공고시 공동도급 49%, 하도급 50% 이상을 명시하고, 지역 자재도 85% 이상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강원에코홈페어-주택건설건축박람회를 통해 지역업체 제품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도 실시, 도내 건설업자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추진될 각종 방안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으면 건설경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동서고속철 예타 ‘경제성 확충안 8건’ 반영 관건

도 “수용 안되면 공개 검증 요구”

속보=26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리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본보 25일자 2면 보도) 실무회의는 예비타당성 조사 쟁점사안 반영 여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타 2차 점검회의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쟁점이 됐던 비용편익(B/C) 추가 반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실무회의로 변경됐다. 도는 지금까지 8건에 달하는 경제성 확충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도가 요구하는 핵심은 오색로프웨이 건설, 주말·관광수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추가 수요 반영이다. 여기에 하루 열차 운행 횟수를 27회에서 22회로 축소하고 노선의 터널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도가 요구하는 경제성 확충 방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개적인 자리에서 검증 요구 등 도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조속한 2차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성현기자

동계올림픽 사업 3개월간 감사

감사원 15명 도청 파견
사업 전반 꼼꼼히 점검
사업 위축 부작용 우려

감사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하면서 사업 위축과 함께 공기 차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SOC·시설안전감사단 15명을 도청으로 파견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도로, 경기장 시설공사 등 올림픽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자료수집과 예비조사를 거쳐 본감사까지 오는 4월 15일까지

실시된다. 감사가 이례적으로 3달 가까이 실시되면서 도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사도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업이 타깃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이어서 더욱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감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올림픽 대회 준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달 첫번째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간의 감사는 대회 준비 전반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촉박한 일정에 쫓겨 공사가 진행 중인 개폐회식장과 경기장, 진입도로 공사의 경우 장기간의 감사에 따른

공기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감사가 지난 1월 황교안 국무총리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망이 가동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황 총리는 당시 5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평창올림픽의 경우 사후에 부정 및 비리가 적발돼도 치유가 어렵다고 보고 사업 착수 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가 3달 가까이 실시되는 예를 이전에 본적이 없다"며 "감사에 대한 사안도 지난주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대규모 SOC사업 실시간 감시 본격화... 총사업비 관리 강화에 초점

발주처, 계약변경 위축 가능성 건설사에 추가비용 전가 우려

필요한 계약변경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기준 마련해야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계약변경 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발주기관이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이유로 계약변경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건설사의 원가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이 주도하는 대형 국책사업 상시 관리 시스템이 활동을 개시했다. 국책사업관리팀은 상시 관리 시스템을 SOC 사업과 R&D(연구개발) 사업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실시간 관리 대상 SOC 사업은 원주~강릉 철도 등 평창동계올림픽 접근 도로망(8조4000억원)과 삼성~동탄을 잇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1조6000억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1조4000억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1조2000억원) 등이다.

특히 국책사업관리팀은 이들 SOC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 공기 지연 등에 따른 총사업비 부담 증액에 감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부당한 총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던 만큼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새는 예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게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역할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액과 부정·비리 요소 등을 사전에 차단해 대규모 SOC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계약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약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국책사업관리팀의 감시가 두려워 계약 변경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OC 사업과 관

련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발주기관이 계약 변경을 소신 있게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며 “추가 공사 등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분을 건설사에 떠넘겨 건설사의 원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 하에서도 필요한 계약 변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리 대상 사업에 따라 예측가능한 계약 변경 사항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구체적으로 담아 발주기관이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의식하지 않고 계약 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리 대상 사업 중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진 않았지만 현장에선 얼마든지 발생가능한 얘기”라며 “실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정당한 계약 변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산업 '체질 변화·혁신' 주력

“우리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인들 스스로의 체질변화와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회원사들에 이 같이 당부했다. 이와 궤를 같이해 건협의 올해 사업계획은 건설산업 체질변화와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건협은 올해를 건설산업 혁신을 준비하는 해로 삼을 계획이다.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건설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혁신운동 방안 연구에 착수한다. 건설산업 혁신 추진협의체도 구성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어젠다도 도출한다. 이 같은 작업을 거쳐 건협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대대적인 '건설산업 혁신운동'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혁신 추진방향은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품질과 기술력 중심의 공공발주제도 △건설 참여자의 의식 선진화 및 상생협력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 양성 △선진 건설금융시스템 및 글로벌 건설시장 정보체계 구축 등이다.

동시에 생산체계 유연화와 업역구조의 정상화, 건설관련업종 일원화 등 생산체계의 혁신과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건설업 진출입 체계 합리화, 면허 불법 대여 근절, 부실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위한 관리기능 강화도 올해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성과를 거둔



**법·제도 글로벌 스탠더드화
품질 중심 공공발주 정립
참여자 의식 선진화하고
전문성 갖춘 중소기업 양성
선진 금융시스템 등도 구축**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고삐를 더욱 죄다.

먼저 규제개선 활동으로 부정당제재 중복처벌과 하도급 관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응 등에 나선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 표준공기 산정체계 수립, 표준시장단가 제도 실효성 확보, 표준품셈 합리적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서는 대상 발주기관을 확대하고 불공정 관행 사례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발주기관의 보복행위 금지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수요 창출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역시 건협이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다.

올해는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물량 창출, ICT 융복합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 노후 인프라 시설투자 확대와 생활형 기반시설 공급 등 국민안전과 복지확충을 위한 건설사업 창출에도 힘을 모은다.

건협은 이와 함께 적격심사제도 개선과 실질자본금 인정기준 완화,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신기술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해소도 올해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건설업계의 사회공헌 확대와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도 올해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출범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이공계 살리기 장학사업 △급여결정 기부약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개보수사업 △건설관련 대학생 아파트 공동거주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동으로 시행해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CPTED) 사업도 올해 지속적으로 진행해 건설산업의 사회적책임 실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석기자 jskim@